

국민소통으로 중도층 지지세 확장

민주 미래로소통위 전북 대선필승 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선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로소통위원회 전북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본부 상임위원장과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과 이학수 중앙본부위원장(전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한완수 도의원 등 도내 14개 시·군 광역 및 기초의원, 지역 및 직능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24일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고 출범한 미래로소통위원회는 전국 광역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전환 혁신과제 및 미래제 발굴·설정과 다양한 형태의 국민소통·홍보활동으로 중도층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인 상임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로소통위원회 전북도위원회가 지난 21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다"며 "현재의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공동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미래의제를 선점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민생현장에서 지역주민들

과 소통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선거캠페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위원회는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인보다 이재명 후보와 당을 우선하겠다"며 "내가 이재명이다 라는 자세로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헌신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미래로소통위원회 전북위원회는 위원 배가운동을 통한 지지세력 결집과 SNS 소통방을 활용한 이재명 후보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상 기자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 13억1100만원

전북선관위, 한도액 산정·공고 기초단체장 평균 1억4000만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결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

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7회 지방선거와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선거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

수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 의원선거가 평균 4,8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3,7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역 종합개발계획, 주민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깜짝 동네방네 탐방기' 일한 유아동 3가 장애마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 나서

전주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가 '깜짝 동네방네 탐방기' 일정으로 '서신동마을 계획추진단'과 접촉을 위한 '우아동 3가 장애마을'을 지난 19일, 21일 연이어 방문했다.



이에, 우 전 부지사는 "숲의 경우, 간벌을 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야 숲 기능이 지속되는 것처럼 미니공원이든, 숲이든 가로수든 만드는 것보다 유지·관리에 행정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3개 공원을 연결해 둘레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전 부지사는 주차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유유공간·주차를 활용하거나 수도권과 같이 담을 터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우 전 부지사는 "특히, 문화·돌봄 등 각 동별로 소통과 공감, 공유가 자유로운 행정복합커뮤니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LH의 일방적 대규모 택지개발로 미찰을 빚고있는 장애마을 주민들은 우범기 전 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 개발을 추진하려는 LH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장애마을 개발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주거공간 제공은 필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 수용방식은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 공급과 영구 임대주택 등 공익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내버스 운행과 도로 개설 등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범기 전 부지사는 "전주역역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장애마을 등 전 주역 동쪽을 개발해 명품주택·커뮤니티, 소공원 등 종합개발계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 공급과 임대 후 분양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과 버스·도로 등 교통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김윤상 기자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체육발전 위해 힘 모으자"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전 주시체육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성경찬·김만기 도의원, 재향군인회 공로패

전북도의회 성경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만기(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 21일 대한민국의회 재향군인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성경찬·김만기 의원이 고창 향군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헌신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로패 전달은 성홍제 고창군재향군인회 회장이 대신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역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고창군재향

군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만기 의원은 "수상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고창군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대선 승리... 익산 승리...

민주 익산갑지역위, 대선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익산갑지역위원회가 지난 20일 송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대선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갑지역위원장인 김수홍 국회의원과 지역선대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원 100여 명이 참석해 대선 승리를 향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익산지역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선환 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구성됐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익산지역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에 호원대학교 유은미 교수,

사회적기업 사각사각 권순표 대표, 장점마을대책위 최재철 위원장, 미주치과 정승길 원장이 임명돼 지역 선대위를 이끌게 됐다.

익산지역선대위 감광현 청년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이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인 유망한 희망을 명심한다"는 결의문을 선창하며, 선대위의 결속력을 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수홍 의원은 "항상 균형발전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전북과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원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자"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 상설화 첫 추진과제로 '조례 제·개정'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1일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의 운영이 동법6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김제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도 같이 작용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 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5명의 시의원으로 출범한 윤리특별위는 다음날 제1차 윤리특별위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은 서백현 김제시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은 김주택 경제행정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는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기존 비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역할에 적극이라고 판단해서다.

서백현 위원장은 윤리특별위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잡는 데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추진과제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제=팩도태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가 지난 21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익산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또 13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7명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재구 의장은 "임인년 첫 임시회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 드린다"며 "익산시의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농어업인 주기적 건강검진 의무화'

김수홍 의원, 복지 증진 법안 3건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 갑)이 지난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관리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의 경우에도 농어업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했다.

김수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해 실정이다"면서 "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의원이 지난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송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돼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